

에너지 미공급지역 주민 지원

두세훈 도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도의회 본회의 통과 도지사 책무·기본계획 시행·에너지복지 등 담야

전북도의회가 도내 전기·도시가스 등 에너지 미공급지역 주민들이 보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에너지 주거복지를 위해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도의회 두세훈 의원(원주2·더불어민주당·농산업경쟁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전라북도 에너지 미공급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31회 도의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두 의원은 "인간의 삶에 에너지는 필수재로 한국에 전기가 공급된 지 134년이 됐음에도 아직도 도내에는 에너지가 공급되지 않아 주거에너지복지 사각지대에서 시름하는 도민이 존재한다"며 "이를 위해 제도적 근거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조례제정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두 의원은 "무(無)경제성으로 에너지 미공급지역을 방지하는 것은 평등권과 공공재의 비배제성 원리에 어긋나며, 이 제는 국가가 국민의 적정 온도를 책임져야 하는 시대이다"라고 에너지 복지지원을 강조했다.

수렴했으며, 관계 기관들과 많은 논의 끝에 조례를 제정, 에너지 복지사각지대의 도민을 위해 실현성 있고 체계적인 방안을 조례에 담았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에너지 미공급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에너지 미공급지역 현황과 수요 등에 대한 실태조사, ▲에너지복지사업, ▲위원회 역할,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 등이다.

이 조례가 시행되면, 도내 에너지 미공급지역에 태양광발전기 및 기술린자발전기가 우선 지원되고,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은 태양광설치 지원과 전기요금 상대적으로 저렴한 심야전기를 이용할 수 있는 지원 등 에너지 주거복지의 실질적인 지원이 예상된다.

끝으로 두세훈 의원은 "에너지 미공급지역 주민 지원을 위해 제도적 근거를 구축함으로써 에너지 복지사각지대에서 한파와 폭염을 오롯이 견디고 있는 도민들이 보다 보편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갑질행위 근절·피해자 지원 제도적 근거 마련

국주영은 도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도의회 본회의 통과

전북도의회가 전북도 소속 공무원 등 갑질 행위에 대한 피해자 등을 보호·지원하는데 필요한 제도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주영은 의원은 "전북도 소속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피해자 등을 지원해 모두의 인권이 존중되고 보다 건전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체계적인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며 조례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국주영은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갑질 행위를 근절하는 분위기가 조성돼 공직자 상호간의 존중하는 문화를 형성하고, 인권이 증진돼 보다 정의롭고 공정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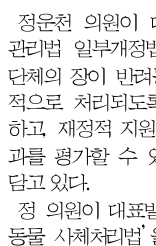
농산업경쟁위원회 국주영은 의원(전주·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전북도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이 지난 24일 제38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국주영은 의원은 "전북도 소속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피해자 등을 지원해 모두의 인권이 존중되고 보다 건전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체계적인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며 조례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국주영은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갑질 행위를 근절하는 분위기가 조성돼 공직자 상호간의 존중하는 문화를 형성하고, 인권이 증진돼 보다 정의롭고 공정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정운천 의원, '인도적 반려동물 사체처리법' 대표발의

대부분의 반려동물이 사후에 폐기물 봉투에 담겨 처리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처리되고 있는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정운천 의원은 "인도적 반려동물 사체처리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사체처리비용 부담을 줄여주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처리되는 반려동물 사체를 적절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운천 의원은 "인도적 반려동물 사체처리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사체처리비용 부담을 줄여주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처리되는 반려동물 사체를 적절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호상 기자

식품 연구기관 R&D 강화 방안 '공감대'

민주 김수홍 의원, 김현수 장관에 식품클러스터 활성화 요청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수홍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3)이 27일 농림수산업부 김현수 장관을 만나 국가식품클러스터(이하 국식클) 활성화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김수홍 의원은 "농식품부가 국식클 활성화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김현수 장관은 김 의원의 제안에 공감하고, 현재 국식클이 직면한 열악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지난 24일부터 세종시 국토교통부 청사 앞에서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김 의원은 이날 4일 차 시위를 마친 후 농림수산식품부를 방문해 김 장관을 만났다. 김수홍 의원은 "농식품부가 국식클 활성화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김현수 장관은 김 의원의 제안에 공감하고, 현재 국식클이 직면한 열악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김 장관은 "국식클은 집적화를 통해 기업 유치의 씨앗을 뿌리고 성과를 얻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야 한다"며 함께 국식클을 활성화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김 장관은 "국식클을 추진 당시 동원 CI 등 앵커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가 없어 무척 아쉽게 생각한다"며 "국식클 활성화를 위한 주변에 청년 창업



전북형 대선 공약 개발 민주 도당 국회의원 워크숍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김성주 국회의원, 전주 B) 소속 국회의원은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전북도당이 선도하고 중심이 되는 전북도 정책 공약 개발을 위해 한 자리에 모였다. 전북대학교 오영준 교수의 '세계적 흐름과 대한민국의 미래'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전북연구원의 '전북도의 객관적 현황 및 제4차 전북 종합 계획' 등의 강연을 듣고 현안에 대한 토론을 이어갔다. 김성주 전북도당위원장은 "전북 발전을 위해 주력 전략 산업 발굴과 지역간 연계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 중요하다"며 "오늘 워크숍을 통해 전북도당이 선도하고 중심이 되는 정책공약 개발을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김영범 의섭되면 '1339'로



전주시·군의회 의정협의회가 27일 제263차 월례회를 남원에서 열고 각종 인건을 논의했다.

"공공의대 설립 의료 사각지대 해소 위해 필수"

전북 시군의회 의정협의회, 촉구 결의안 채택 동부내륙권 국도 정읍~남원 구간 5개년 계획 반영 달빛내륙철도·서해안 철도 국가 계획 반영 건의

전주시·군의회 의정협의회(회장 전주시의회 강동화 의장)가 27일 제263차 월례회를 남원에서 열고 각종 인건을 논의했다. 이날 논의한 안건은 '국립공공보건의료대(원) 설립 촉구 결의안', '동부내륙권 국도 정읍~남원 구간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 반영 건의안', '광주대 달빛내륙철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반영 건의안', '서해안 철도(새만금~목포)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반영 건의안' 등 4건이다. 협의회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원) 설립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북 14개 시·군 중 9곳이 응급취약지로 분류되고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지역도 2곳이나 된다"며 "의료 사각지대 해소 및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국립공공보건의료대(원)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또 '동부내륙권 국도 정읍~남원 구간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 반영 건의안', '광주대 달빛내륙철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반영 건의안', '서해안 철도(새만금~목포)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반영 건의안' 등 3건의 안건을 채택했다. 이들은 "도로와 철도 등 교통 SOC는 단순히 이동을 위한 수단인 아닌 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친 지역의 성장판 그 자체이자 지역균형발전의 요체"라며 "지역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경제성 분석과 수도권 중심 사고에서 벗어나 지역균형발전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동화 회장은 "이번 협의회에서 논의한 공공의대 설립을 비롯한 교통 SOC 확충과 관련된 안건들은 교단 수십 년간 나후의 세월을 갇혀온 전북의 역사를 뒤버릴 중대한 문제들"이라며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 해결에 정부와 국회가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민주, 상위 2%에 중부세 부과 추진

당 부동산특위 주택시장 안정 공급·금융·세제 개선안 발표 LTV 우대비율 20%p로 확대, 청년·신혼부부 등 추가 지원도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그동안 논란이 됐던 종합부동산세(중부세) 부담 완화와 관련해 과세기준을 '공시지가 상위 2% 이하'로 개편안을 내놓았다. 또 서민 실수요자에게 적용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10%포인트 우대비율은 20%포인트로 확대하기로 했다.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김진표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 공급·금융·세제 개선안을 발표했다.

재산세 부담 완화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당내에서 이견이 크지 않았던 만큼 1가구주택에 대한 현행 경감세율 0.05%포인트 적용 범위를 현행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안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공시지가 6억~9억 원 구간도 0.3%의 특례세율이 적용되며 이로 인한 재산세 감면액은 가구당 18만 원씩 44만 가구 대상으로 총 782억원이 될 것으로 부동산특위는 추산했다. 주택임대사업자 제도와 관련해서는 메인임대의 경우 모든 주택유형에 대한 신규 등록을 폐지하기로 했다. 시장에 매물이 나오도록 하기 위해 기존 사업자에 대해서도 현행 양도세 증가 배제 혜택을 등록일 후 6개월간만 인정하고 그 이후에는 정상과제한다. 금융 분야에서는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LTV 우대비율을 현행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LTV는 무기·부기과열지구에서 40% 조정대상지역에서는 50%가 적용되는데 무주택 세대주에게는 각각 10%포인트씩 우대해주고 있다. 여기에 10%포인트를 더 올려준다는 것이다. 또 LTV 우대 적용을 받는 무주택 세대주의 부부합산 소득기준은 현행 8000만원(생애최초구입 9000만원)에서 9000만원(생애최초구입 1억원)으로 1000만원을 상향했다. 무기·부기과열지구 6억원 이하 조정대상지역 5억원 이하로 돼 있는 LTV 우대 적용대상 주택기준도 각각 9억원 이하, 8억원 이하로 3억원씩 완화했다. 이에 더해 부동산특위는 ▲주택금융공사 특례보증을 통한 청년층 전월세 대출 지원 1인당 한도 7000만원·4억원 확대 ▲공적 전세대출 전세보증금 기준 5억원~4억원 확대 ▲보증자리론 대출지원 한도 3억원~6억6000만원 상

향을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추가 지원 방안으로 내놓았다. 공공 분야와 관련해서는 3기 신도시와 2·4 대책을 통한 수도권 18만 가구 등 총 205만 가구 공급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신규택지 공급과 입법으로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추가 공급대책도 내놓았다. 지자체에서 제안한 복합개발부지와 타지역 이전 공공기관 부지에 청년·신혼부부 주택 1만 가구를 공급하고 지자체 소유 부지에 '누구나 집' 프로젝트 시범사업을 1만 가구 규모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뉴시스

민주 김제부안지역위 '국민소통 민심경청 프로젝트'

더불어민주당 김제부안지역위원회(위원장 이원택, 국회의원)가 오는 30일까지 '국민소통·민심경청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국민소통·민심경청 프로젝트'는 민주당의 당 혁신방안 마련을 위한 것으로, 30일까지 소상공인, 청년, 농어민 간담회를 통해 각계각층의 민심을 청취할 예정이다. 모든 일정은 철저한 방역수칙에 따라 진행되며, 30일까지 모인 시민들의 의견은 현장민심보고서를 통해 당 지도부에 전달된다. 한편, 지난 28일 김제와 부안에서 열린 '찾아가는 민주당'에서는 균형발전정책, 지방소탈개혁, 검찰개혁 등 전국적인 이슈를 비롯해 김제 백구 전주대대 이전, 지방생산단 폐기를 처리장 부안 세계캠버리 대회, 노을대교 건설, 새만금 해상유통과 개발 등 지역 현안에 관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유호상 기자